

# 환경과의 조화에 청신호를

박 노 경

UNEP 글로벌 500 한국인회 회장



**우** 리나라의 환경문제도 이제 해결의 청신호를 기대할만 하게 되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 부정적 내지 유보적 반응을 나타내는 시각도 물론 있을수 있다. 그러나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96년 봄에 나온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 대통령 선언」을 비롯하여 지난 3~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효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의 구축」내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시행해온 일련의 정책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래의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고 내무부 건교부등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업무가 환경부로 흡수·일원화된 것은 환경기구의 정책기능과 행정집행기능의 연계·강화내지 환경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큰 전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97년도 환경부의 예산을 지난 92년의 환경처 예산(2천 1백 25억원)의 7.7배(1조 8백 억원)나 확보했다는 것도 괄목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기가 예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하여 환경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었을때와 비교해보면, 일할 조건이 그만큼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그 뜻이 크다고 생각한다.

환경법 체계의 정비도 긍정적인 평가 대상이다. 그동안 새로 제정한 법률만 보아도 환경영향평가법(93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94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94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95년), 토양환경 보전법(95년), 먹는 물 관리법(95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96년) 등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의 다양화 추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의지를 강화해온 결과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책으로 「농도기준」 방식을 「총량기준」방식으로 전환한 점이라든지, 1조 2천 5백여억원을 들여 상수도 노후관 중 1만 5천 8백여 km를 개량한 것이라든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에 대한 공해 관리 대책을 강화해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긍정적 현상을 정부사이드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96년 3월말 현재, 정부 허가단체 73개를 포함하여 모두 2백 70여개나 되는 크고 작은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단체 중에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중요 문제들, 이를테면 不通地에다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정부 계획을 중지시키고, 혹은 북한땅에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외국 환경단체와 제휴하여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이는 등 중요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도 있으니 이들 단체가 우리나라 환경문제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한가지 환경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아졌다는 사실도 매우 마음 든든한



일이다. 환경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이 전문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하여 160개나 되고 그 정원은 도합 9천 8백 90명에 이르고 있다. 고급인력의 공급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환경문제의 미래를 그만큼 밝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만 보면 맨 앞에서 내건 물음(청신호 여부)에 대한 답은 다분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오늘의 환경현상을 보면 낙관은 시기상조란 생각도 든다. 정부쪽에서 잘하고 있고 민간단체도 많고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도 많고 교수도 많은데 체감 오염도와 TV등 대중매체를 통해보는 오염상황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특히 서울의 경우 구름 한점 없는 날이라도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바람없는 날은 예외없이 전 시가가 뿌연 오염물질에 휩쌓여 시정거리가 짧아지고 있고, 무악재와 미아리 고갯길 같은 가파른 도로를 거닐면 건강한 사람도 호흡에 자극을 느낄만큼 대기상태가 매우 혼탁 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강물도 통계수치와는 달리 한탄강 임진강등에서는 물고기들의 폐죽음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강 상류쪽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골프장, 여관, 별장, 음식점등에서 배출하는 생활 하수가 계곡물을 썩히고 지천과 강·본류의 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한강의 오염도는 통계수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팔당(BOD)의 경우 95년도 평균은 13(mg/l)였는데 96년도 평균은 1.4로 악화되었으며, 노량진과 가양도 38과 44에서 3.9와 5.1로 각각 악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울의 대기오염도를 95년 11월것과 96년 11월 것을 오염물질 별로 비교한 도표를 보면, 아황산가스와 먼지(TSP) 미세먼지(PM-10), 오존, 이산화질소 등 모든 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있다. 대기오염도의 또 하나의 지표인 서울의 강우 산성도도 95년 11월에 5.4(4.1~6.5)였던것이 96년 11월에는 6.1(4.4~7.4)로 호전되고 있다.

통계상 오염치와 체감 오염의 이러한 관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 실마리는 오염수치의 「평균」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평균」수치로는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종일 계속된 짙은 스모그를 몇번 경험하게 되면, 한달 동안 또는 1년동안에 측정한 낮은 오염도와 높은 오염도를 합하여 나눈 평균 오염치가 낮게 나타나더라도 사람들은 대기오염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마련이란 얘기이다.

오염도의 측정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정시간의 최고치」이지 평균 오염치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오염원의 배출량과 기상조건 등을 감안하여 중시할 것은 오염의 평균치가 아니라 「오염의 최고치」라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해두고 싶다.

여기서 꼭 주의를 환기해 둘 것이 있다. 하나는 산불이요, 다른 하나는 앞 바다의 유탁이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96년의 강원도 고성산불의 경우 3천 8백ha의 임목이 몇일을 두고 불타는 장면을 TV화면을 통해서 보고 가슴 아파 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20~30년동안 자란 숲이 잿더미로 화할때 거기에는 이미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지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그리고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등은 송두리째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산불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최근 몇년 동안의 산불 발생추이를 보면 93년 278건(1천 7백 52ha)였던 것이 94년, 95년엔 각각 4백 33건과 6백 30건으로 늘어났고 작년(96년)에는 5백 27건에 무려 5천3백68ha의 산을 불태워 1백 33억원의 임목피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불의 피해가 임목 소실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림이 갖는 「살아있는 저수지」(수자원)의 기능과 토사유출(산사태)의 방지기능, 대기의 정화기능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가 산불로 해서 일시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산



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유조선의 좌초로 해서 발생하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경우도 어민들의 어로 불가능으로 인한 손실만을 유탁의 피해로 단순화하곤 하는데 이런 계산방식 또한 언어도단이다. 그 경제적 피해이상으로 바다 생태계와 연안의 황폐화등 가치(경관)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앞으로 유탁예방책을 철저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는 미성숙 부분과 정책 사각지대가 상존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4월 15일에 15개 부처 장관들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 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32조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경 기초시설도 대폭 확충하는 「제2차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합계획은 그것대로 시행해야 하겠지만 여기서 꼭 제언해 둘 문제가 있다. 첫째 환경친화적 실천이 따르는 국민적 환경윤리를 널리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옛날 미국에 린지 뉴욕시장때 「시장을 지원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모임에서 환경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갔더니 마침내 자기 자신들에게로 귀착되더라는 결론을 얻고 시민들의 계몽에 주력했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이 메커니즘은 지금의 우리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일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도 국민의 수준 이상의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을 오염·파괴하는 환경윤리 수준이 낮은 국민의 영향을 받는 정치가에게 훌륭한 환경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산불을 내는 것도 국민의 무심이요, 청정해역 근처에서 유조선 좌초시키는 것도 국민과 기업의 무의식·무책임이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런 환경위기에 대한 무의식 상태에 있는 국민과 기업으로 하여금 강한 환경윤리를 빨리 터득케 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지역격차와 지난날의 고도성장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역개발(소득증대)이다」, 「재정 자립도의 달성이다」라는 구호아래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계들까지 마구 잘라내고 파괴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을 적절히 제동하는 일도 중요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젠 인간이 자연을 수탈하고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질서에 따라야 한다.

자연(지구)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고는 인간을 감싸 키우는 자연도 그 속의 인간도 공멸할 수 밖에 없다.

환경 위기를 경고하고 환경윤리를 체질화 하는데는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대중매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신문, TV, 라디오 등 모든 대중매체들이 환경을 중시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획물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법규를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무심상태에다 환경윤리와 준법정신을 채워주어야 한다. 국민이 환경윤리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양식을 크게 바꾸어 그것을 생활화 할때, 그리고 정부의 환경정책이 좀더 치밀해지고 지방 자치단체의 욕심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때,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것이다.